

사회

시교 칼 뺨 검·경 움츠린 지역 관가

뒤통 의혹 시교육청·동구청 공무원 소환... 보도방 유착 경찰도 조사

검찰과 경찰이 올 초부터 진행중인 공직비리 수사에 대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어 지역 관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 수주과정에서 '뒤통'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직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재활용품 처리과정에서 '헐값 매각' 의혹을 받고 있는 동구청 공무원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경찰도 '보도방' 업주가 현직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상납했다는 주장을 토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경찰, '뇌물 상납' 시교육청 수사 = 광주동부경찰청은 8일 학교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모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시교육청 직원 B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시교육청의 기술직 직원 C씨에게 금품을 상납했다는 진술과 함께 뇌물의 항목과 액수, 시기 등이 담긴 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시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리

모델링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하청받은 업체의 대표로,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 직원들 폐기물처리 잠을 '줄소환' = 동부경찰청은 재활용품을 헐값에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동구청 직원 3명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최근 폐기물처리를 담당하는 주부과장인 C씨 등 3명을 불러 재활용품 매각 과정에서 단가를 통상 가격보다 낮게 잡고, 헐값에 업체에 넘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청의 재활용품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헐값 매각이 이뤄졌는지의 여부와 이 과정에서 업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C과장은 "재활용품을 헐값으로 팔아넘긴 사실은 물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문"이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경찰관에 금품 상납" 의혹 사실확인 = 검·경은 8일 보도방 업주

D씨가 "경찰관들에게 돈을 상납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날 "현직 경찰관 4명에게 매달 50만원씩을 건넸다"는 D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D씨는 지난해 말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어 지난 2월에도 보도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금품 상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들은 "(D씨를) 전혀 모른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검은 일단 D씨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한편, 보도방 업주들의 불법영업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구속된 보도방 업주 등 7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경찰 등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이팅게일 선사

광주여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8일 대학 어등관 세미나실에서 간호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불법낙태' 검찰 메스 어디로...

의사회, 광주 모 병원 고발에 병원측 "무고" 맞고소

최근 불법낙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낙태 근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이하 의사회)가 광주지역 모 병원을 낙태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해당 병원은 의사회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검찰과 의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의사회에 의해 불법 낙태시술 혐의로 고발된 광주 모 병원이 최근 의사회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병원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의사회가 병원 차트에도 없는 환자를 양세워 검찰에 허위사실을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의사회가 해당 병원을 고발한 사건과 병원 측의 맞고소 사건을 모두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검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문제의 병원에서 실제 불법낙태 시술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의사회 불법 낙태시술 고발의 수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의사회와 낙태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산모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입장인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의사회가 제기한 불법 낙태시술 고발사건은 현재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 2곳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의사회는 서울지역 병원 2곳

과 경기지역 1곳, 광주지역 1곳 등 전국 병원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의 병원 2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고, 안양지청은 병원 사무장 1명을 낙태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형법상 낙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통한 임신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낙태를 허용함에 따라 낙태죄가 유명무실화 되자 의사회가 낙태 병원들을 고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081) 김장두



빈집 상습 절도 대학생 영장

광주북부경찰청은 8일 주택가 빈 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던 전남 모 대학 학생 박모(25)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6일 남구 방방동 한모(38)씨의 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1천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인터넷 동호회원 집서 옷·신발 훔쳐

○인터넷 친목 동호회 사이트에 서 만난 여성의 집에 놀러가 옷과 신발을 훔쳐 달아난 지명 수배자를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

○8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B모(여·28·광주시 동구 학동)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사는 이모(여·27)씨의 집에서 이씨의 욕실에 들어간 사이 코트·부츠·가디건 등 시가 26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갔다.

○7건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은 B씨는 한 달 전 인터넷 한 카페에서 알게 된 이씨와 동호회 모임에 함께 가려고 집을 찾아갔는데, 경찰에서 "거실에 있던 옷을 보자 순간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극우단체 "5·18 공개토론" 엉뚱한 제의 5월단체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일축

북한군의 5·18 개입설을 주장해 온 극우단체 '자유 북한 국민연합'이 5·18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과 관련, (사)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관련단체에 공개토론회를 제의했다.

자유 북한 국민연합 임천용 대표는 8일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80년 5·18 당시 북한군이 실제 개입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 진실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5·18의 진실이 밝혀지고 재조명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대표는 특히 "5·18에 대한

재조명은 민주화를 무작정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5·18'이라는 벽에 기대어 국가발전의 저해하는 친북세력의 뿌리를 없애는데, 토론회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5·18 유족회 관계자는 "5·18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데다, 희생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는 만큼 관할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5월 단체나 시민들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최희동 예비후보 사무실

괴한침입 흔적...경찰 수사

민주당 최희동 광주광역시의원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한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30분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 H빌딩 4층에 있는 최 예비후보 사무실 출입문 전자 자물쇠 번호판이 뜯겨진 채 발견됐다. 사무실 내부와 연결된 유리문도 현관문도 열려 있었다.

사무실 책상 서랍을 뒤진 흔적과 함께 일부 서류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사무실 내부 피해 물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물품이 없는 점으로 미루 단속 정도만 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나 의도를 갖고 몰래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살인미수' H수련원생 항소심서 형량 가중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H수련원 원생 황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피해자와 짜고 '자작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의 여러 정황이나 흥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45분경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원장을 괴롭히지 말라"며 박모(43)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가짜 비아그라 '불개미그라' 유통 적발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 위반)로 조진숙 유학생 안모(29)씨를 구속하고 김모(2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구 등에서 시가 2억4천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개미그라' 3만정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치료제 5만정을 압수하고 중국에서 원료를 제조한 이모(29)씨와 치료제의 국내 유통을 맡은 박모(4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연합뉴스

7.9 공무원 경찰직

합격 전문학원 **합격이면 합격은 쉽고 빨리됩니다!**

→ 2009년 입사, 연봉 474만원(국가보훈) 월급 300만원, 퇴직금 1000만원, 70%정액 장학금
 → 2009년 입사, 연봉 474만원(국가보훈) 월급 300만원, 퇴직금 1000만원, 70%정액 장학금
 → 2009년 입사, 연봉 474만원(국가보훈) 월급 300만원, 퇴직금 1000만원, 70%정액 장학금

개강)매월 1회 **평방직/교육평방직/사무직** **나일귀반**
경정직/소방직 전문 **국어:송태웅선생님**

경정직 서울고시학원 전문-합격률 100%의 명문 서울고시학원에 감사함
서울경찰전문학원 | 251-7959 |

합격 전문가 **서울고시학원** 514-4560 **MDP Pass** **합격학원** 02-233-4553 **MDPass.com**

의사/약사가 되는길

합디패스 의학원!!! 합디패스 약학원!!!

PEET / MEET / DEET
합디패스 **합디패스** **합디패스**

합디패스 의학원 **합디패스 약학원**

합디패스 **합디패스** **합디패스**

합디패스 **합디패스** **합디패스**